靑 "北 김정은 답방 시점 언제될지 모르니 준비만"

"상황들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 있어"

7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그림 작품이 설치돼있다.

청와대는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해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을 뿐,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답방 시점과 관련해 여러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담감도 토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답방은) 언제가 될 지 모르니 준비하고 있는 차원일 뿐,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이 정해져서 거기에 맞춰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측에 충분한 메시지는 가 있는 상황이고, (만일) 답방을 한다면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서 북측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라며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안은 준비하겠지만, 시점을 예측하거나 못 박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메인프레스센터(MPC)도 준비 안 돼 있어서 만약에 (김 위원장이) 온다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MPC도 없이 (남북 정상회담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되, 노심초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에서 13~14일, 18~20일 등 김 위원장의 예상 답방 시점을 보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계속 부인을 해왔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에서 이뤄지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결정의 문제"라며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북측에서 오겠다는 메시지다. 그런 의사 결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 답방) 날짜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출발과 동시에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갑자기오고, 당일 발표를 하는 식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어떻게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도 앞선 남북 정상회담의 프로세스를 준용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엔 "최소한 북측에서 답사는 와야 한다"며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도 평화의 집에 대한 답사 과정이 있었듯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답방 발표가) 오늘 나오느냐, 아니냐' 이렇게 청와대만 지켜보는 것은 저희들도 부담스럽다"며 "상황들을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김병준 "김정은 답방 날짜 깜깜…왜 이렇게 서두르나"

"정상회담 의제, 어떤 얘기도 없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설에 대해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일이며 정상 간의 회담인데 아직도 일정은 고사하고 답방 날짜부터 깜깜이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과연 세계 어느 민주국가의 정상회담이 이렇게 일정을 이렇게 잡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정부가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대통령의 연말 일정은 다 비워놓고 있다. 언제 오시든지 경호, 일정, 의전 등 환영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릴 테니 날짜를 택일하시라'는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서민들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대통령께서 한 해 국정을 되돌아보면서 내년도 경제와 민생을 살릴 국정 구성을 하기에도 모자란 시간 아닌가"라며 "비핵화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끌어 낼 수만 있다면 연내면 어떻고 내년이면 또 어떠냐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답방이 사실상 가시권에 들어온 듯한데 정상회담의 '의제'에 관해서는 그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정부 들어 남북관계에 관한 정책의 투명성이 사라진 지 오래지만, 과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든, 외교안보실장이든 책임 있는 당국자가 나서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담을 할 것인지'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과 김 위원장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민주국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절차와 과정이 있고 또 지켜야 할 자존심과 격이 있다"며 "어째서 전부 다 버려가면서 추진하려고 하느냐. 대통령과 정부의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또 임시국회 열리나…유치원3법 · 김상환 처리 관심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가 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민주 · 바른미래 '유치원3법' 합의했지만 한국당 반대로 무산돼

김상환 대법관 후보, 한국당 적극 반대…야3당도 반대표 던질 듯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가까스로 통과시키면서 정치권이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해 임시국회나 원포인트 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은 전날 본회의에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 올려놓기 위해 수차례 협상을 거듭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주된 쟁점인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교비유용 처벌규정과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안심사소위는 개의도 하지 못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당초 최소한의 처벌 조항을 넣는 절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유치원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재산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잠정안을 마련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에 대한 처벌규정 차등화 등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표류하면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정부가 주는 지원금은 형사처벌을 가하더라도 학부모분담금은 나랏돈이 아닌 만큼 행정처분 등 다른 제재 수단을 검토하자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만큼 유치원 3법을 처리하려면 국회가 별도의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세부적인 쟁점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유치원3법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한국당이 예산 협상 과정에서는 민주당과 전략적으로 '동맹'을 맺었지만, 유치원3법의 경우 두 당의 시각차가 명확한 만큼 이를 좁히는 데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사립유치원 비리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오면서 정치권이 팔을 걷어 붙여 중점적으로 추진한 법안인 만큼 일부 이견만 좁혀진다면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3법을 처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낙관론도 나온다.

여권에서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적절한 '타이밍'을 고르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당시 민주당은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 채택을 제안했으나, 한국당은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등을 이유로 대법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해 보고서 채택마저 거부했다. 당초 보고서 채택에 우호적이었던 바른미래당도 선거제개편 논의가 진척이 없자 반대로 돌아섰다.

민주당으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임시국회나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으나, 야당으로부터 원만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을 예산안과 연계 처리해야 한다는 야(野)3당의 요구를 민주당이 묵살한 만큼 본회의 표결에 부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지난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례처럼 본회의 표대결에서 민주당이 밀릴 경우 문재인 정부의 리더십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집권여당도 체면을 구길 수 있다. 이럴 경우 얼어붙은 정국이 더 급속도로 급랭될 수 있다.

민주당 "박근혜 탄핵 2주년, 적폐청산 계속돼야"

더불어 민주당은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년을 맞아 "적폐청산으로 공정한 사회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2년 전 오늘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정농단을 단죄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염원은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며 "촛불의 명령은 적폐청산과 정의로운 나라다. 우리는 이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보수대통합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헌법과 국정을 유린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불구속 수사와 사면이라는 정치적 흥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당치도 않은 발상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사회, 다 함께 잘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도정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